

“軍이 법원 해킹하다니” 여야 성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2일 열린 국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서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2011년 이후 법원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 및 성공 여부, 해커 추적 현황에 대해 과학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지적했다.

다수 의원, 해킹 시도 현황 등 자료 제출 요구

대법 “있을 수 없는 일…진상 조사해 보겠다”

주문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태하 전 산리 전단장의 댓글 공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같은 해 국기정보원이 유관기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묘하게도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한 M번군 해” 정부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불법을 잡아낸 것”이라며 “소도둑이 빼 지도둑을 잡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이버사는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지만 이는 사법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러나 법원은 해킹 여부 요청을 하면 매년 그런 바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사 해킹으로 어떤 정보가 훔쳤는지 정확한 피해 실태를 확인해달라”며 “왜 이러한 해킹 사례를 법원은 확인하지 못했는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짧은 시간을 통해 “기사만 보더라도 범죄를 구성하기 충분하다. 경찰동지할 일”이라며 대법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는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은 “우리 전산망은 내부망으로 독립돼 있어서 외부 해킹이 성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송영무, 김관진 겨냥 “軍 정치댓글, 지휘고하 막론 수사 확실히”

김병기 “국방부는 기승전-김관진” 지적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논란과 관련 ‘새로 편성된 사이버사령부 재조사 TF’에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수사를 확실히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

주당 의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설립과 졸업생 취업 등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말했다.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는 2012년 1학기부터 신인생을 받았다. 국방부는 해당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사이버정보센터 5팀을 만들고 이들을 사이버부대에 전속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

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사이버사령부를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회한한 일들이 많다”며 “국정원이 기승전-원세훈이라면 국방부는 기승전-김관진”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과거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망을 통해 정외대에 462건의 보고문건을 발송한 것과 관련 “제 판단에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2012년에 사이버사령부가 예산요청을 안하는

데 국정원에서 이례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다”며 “예산으로 활동한 내역을 보면 단순히 댓글 공작이 아니라 합성시전을 배포해서 정권관계자를 영웅시하고 비판세력을 인신공격하는데 능력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군형법 위반이 아니며 ‘이 상황의 전말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적이 주요 보직을 맡는 건 배제돼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정권이나 평가하기 뒤하지만 재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으면 확실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외교안보 위기를 방지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중,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 상황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심각한 위기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5부 요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안보위기가 외부에서 조성되는 상황이라 우리가 주도할 요건 안 된다’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우리 동의 없이는 한반도 전쟁도 없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계획도 역할도 없

다는 것을 지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선후보시절 집권하면 사드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큰소리쳤고 방미 성과로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무능한 아미추어 외교 전략으로 중국으로부터 회복하기 힘든 경제보복 폭탄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외면 받는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려니 정작 위기 닥쳐오자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면서 책임 전가하고 있으니 국민은 불안하기만 한다”고 덧했다.

이용호 정책위원장도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지난 10일 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예고 없이 한반도 상공 전개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와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다고 한다”며 “당시 문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의 치킨게임으로 우리의 운신쪽이 대단히 좁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무력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빌언 삼가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력감 표출 대신 트럼프 행정부에 새 대북전략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전쟁방지를 포함한 우리 입장 반영 노력은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보수통합, 빠른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통합 설득 실패시 ‘분당’ 가능성 내비쳐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이상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이란

것이 시간을 끌면 영뚱한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정당 내 대표적 통합파인 김 의원은 “(보수 통합 대리인인) 28일로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모여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 당 대 당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을 반대하는 지강파 등을 설득하는데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는 “당 대 당 통합에 준하는

보수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데 대해 “정치인들이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과정에서 선지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통합을 반대하는) 여론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지역공감·미래·강조·정책직불
湖 南 新 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재품의 모든 것

광주전남석제품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